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인천광역시 사례연구*

김 판석 (서울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이 시대의 새로운 학제로 등장하고 있다. 각 분야마다 구조조정을 위한 름부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즉 2차산업 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특성화, 2차산업과 3차산업간의 윤활, 산업의 적인 번수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본고에서는 산업구조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살펴보고, 민관학연의 충체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저부가가치형 쇠퇴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미래형 산업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경제에 대한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본다.

I. 서 언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외적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경제환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냉전종식과 WTO체제 출범 이후 국경의 의미가 크게 희석하면서 세계는 지구촌으로 하나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고, 한편에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별·경제권역별 볼特派화를 도색하여 세계적인 조류에 적극 참여하려는 경향이 오늘날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이념의 양대축으로 하는 가·방학·정보화·자율화 추세 등 세로운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 각국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사회·구조 개편을 통하여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와 OECD가입을 계기로 신조류 물결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에 와 있다. 특히 국제화의 물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을 알리는 6·27선거 이후 그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발전전략개념이 중앙중심 혹은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설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식이 최근에 와서 세계는 물론 경·관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 본 연구는 1997년도 인천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있다.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역할 분할이 중요하며, 특히 재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주어야 지방정부나 경제단체가 보다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국가중심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국가발전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발전의 주체가 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절실히며, 해외와 수도권으로부터 유망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여 특성화나 차별성있는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지방간 경쟁적 발전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등등한 기회와 선의의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산업구조 조정분야는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로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산업구조로 조정함에 그 초점을 둔다. 물론 인위적인 조정은 상당한 부작용도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고에서는 산업구조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살펴보고, 지역전체, 즉 민·관·학·연의 총체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서부가치형·쇠퇴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미래형 산업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을 제조업에 한정시키지 않고, 1차산업인 농수산업, 3차산업인 R&D나 유통, 디자인, 설계 등을 포함하여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산업전체적인 균형과 각 산업 및 일종별 상관관계를 통하여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아직도 중앙으로부터 자치단체의 독자적 영역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해 본다.

II. 인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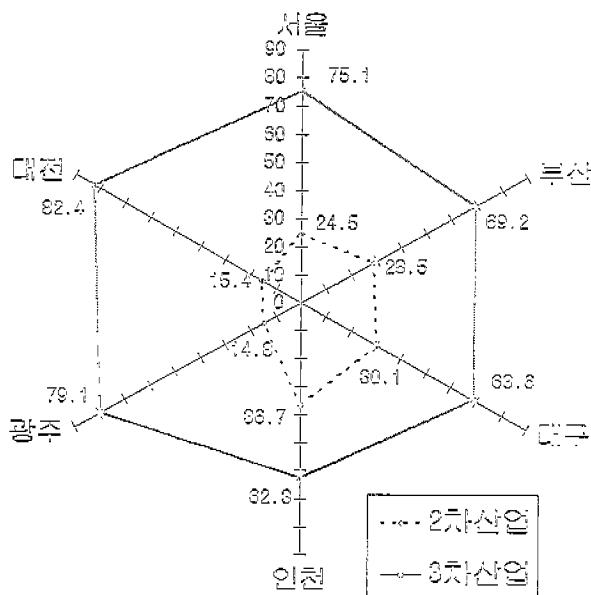
인천은 수도서울과 32km의 근거리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¹⁾ 인천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중공업위주의 임해공업단지로 부상하였다. 1993년 현재 인천지역의 제조업총생산은 전국총생산의 7.9%에 달해 서울의 10.5%이 이어 7대도시 중 2위에 꿀하고 있다.²⁾ 1995년 3월에 인천광역시가 됨으로써 기존의 인천시에 용진군, 강화군, 김포의 겸단면이 편입되어 총면적 954.4km²으로 서울(605km²)의 약 1.6배에 달한다. 용진군에 속한 역들 도

1) 인천은 수도권 일대의 소비물자 공급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경인공업지대 및 충부권역의 기간산업 원자재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항은 내항(44선석 규모), 날항(9선석 규모), 북항(3선석 규모), 연안항구로 구성되어 있고, 접안길이는 12.5km, 동시접안 가능척수는 56척, 연간 하역능력은 28,913 천톤이다. 인천항은 취급물동량 규모로는 전국 1위이지만, 수출보다는 수입항이다(수입화물이 의항 총물동량의 81%임). 인천광역시, 「인천경제발전5개년계획」(인천: 인천광역시, 1996), 22쪽.

2) 제조업 지역내 생산구성비는 서울(10.5%), 인천(7.9%), 부산(5.8%), 대구(3.0%), 광주(2.0%), 대전(1.9%) 등이다. 상계서, 25쪽.

서, 강화군, 경단면이 편입되어 종래의 제조업 및 항만산업 중심의 인천시의 더불어 금교농업, 수산업, 환경업, 철단정보산업 등의 조화있는 산업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인천광역시, 1996; 김관석, 1997).

〈그림 1〉 6대도시 산업별 취업자 비교 (단위: %),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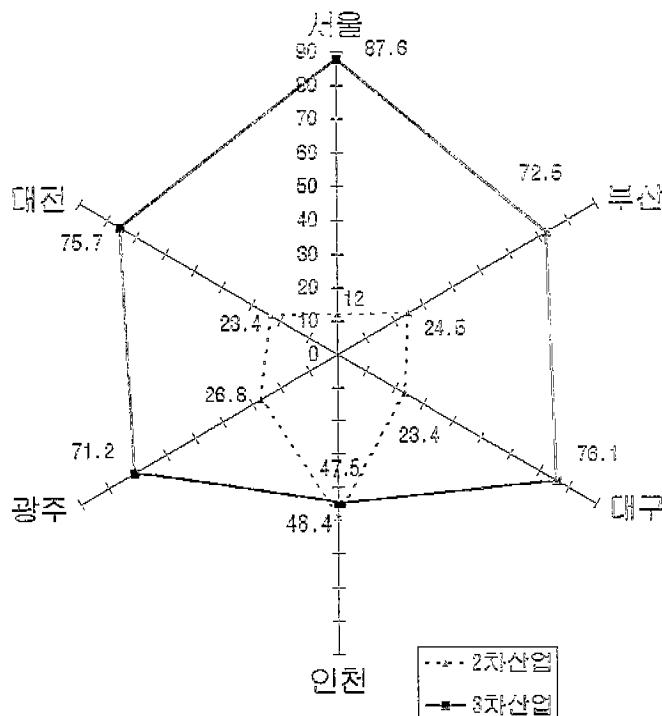


자료: 홍계청 (1995)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인구증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의 인천광역권의 인구증가율은 연 평균 5.2%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으며 자연적 증가보다 서울인구 유입 등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한 증가가 크다. 1997년 현재 인천의 인구는 230만명 정도이며, 향후 10여년 이내에는 300만명 정도에 유통될 전망이다. 1990년대 인천의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여율은 62%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실업률은 1994년 현재 2.8%로 전국평균 2.4%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인천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농림어업, 광공업이 작아지고, 반면 사회간접 및 기타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절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은 1994년 현재 전국 대도시 중 경제활동 참가율이 62.1%로 서울(62.9%) 다음으로 높다.³⁾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인천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경우 1994년을 기준으로 총취업자 923,000 여명 중에 1차산업이 1.1%, 2차산업이 36.7%, 3차산업이 62.3%이다. 1991년부터 1994년의 추세를 이용하여 2,000년 총취업자를 추정하면 약 10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3) 1994년 현재 대도시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62.9%), 부산(59.9%), 대구(58.8%), 광주(55.9%), 전(56.6%) 등이다. 상세서, 31쪽.

〈그림 2〉 6대도시 산업별 생산구조(경상) 비교 (단위: %), 1993



자료: 통계청 (1995)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인천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3차산업 도시였다. 1965년 인천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는 1차산업이 6.9%, 2차산업이 30.6%, 3차산업이 62.5%로 산업의 철강적 비중이 3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이미 실시해오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인천지역에 수출 산업공단 4·5·6단지, 인천지방공업단지, 인천기계공업단지, 인천독제공업단지 등 대규모의 공단이 조성되고, 우리 나라 수출산업의 거점생산도시로 육성될에 따라 인천은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2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1차 및 3차산업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1960년대에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취업자가 2차산업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1차산업의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2차산업의 취업자비율은 줄어들고, 3차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완만하지만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지역의 지역총생산은 전국지역총생산의 약 5.0%에 이르며, 1993년 현재 2차산업이 전체지역내총생산의 48.4%로 3차산업의 47.5%보다 조금 높다. 다른 대도시의 경우 3차산업의 비중이 70-80%수준인데 인천은 47.5%로 전국의 대도시에서 제일 낮다. 다시 말해서 2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산업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2차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완만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인천관내에 조성된 공업단지 내지 공업용지가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특히 1978년 이후 공

업부처를 끌고 따라 인천이 제2한정비권역에 포함되어 산업배치면에서 신규임지 조성이 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신·증설까지 제약을 받으므로써 공업기반의 양적 평창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⁴⁾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일관되게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이었다. 즉 한국경제의 균형화는 수출을 통한 공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이룩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개발전략 속에서 농업보다는 공업을,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질증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이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제성장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0년대까지 이른바 거점개발방식에 따른 국토개발전략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경인 지역을 중심하여 영남지역 등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국토개발전략은 인천경제의 물적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더욱이 수도 서울의 관동으로서 수출·입의 편리한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지형 공업과 수출형 공업이 입지하기에 매우 편리하였다. 그래서 인천시는 공업입지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국가공업밸리에 따른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져 불과 10여년 사이에 산업구조가 항만관련산업을 위주로 한 3차 산업으로부터 대규모 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 위주로 변화되었다.

III.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틀

산업구조조정(industrial restructuring)은 현재 산업의 경제적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요구되는 공간의 간격을 좁혀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간격은 주로 기술, 조직, 마케팅, 기적요인 등에서의 세계적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구조조정은 따라서 산업이나 기업이 생산체계나 비용구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 갈 때 성공적일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은 기업자신이 급변하는 세계적 환경변화와 거시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구조조정은 기업자신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산업구조조정은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침식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기업내, 기업간 구조변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 재정조정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산업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은 국제경쟁력, 효율성, 기업이윤 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유사한 개념들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structuring)은 등일한 생산체계를 개선하거나 혁신화하는 재건(rehabilitation)보다는 강한 개념이다. 재건보다는 더 많은 기분적 변화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은 기업확장파도 다르다. 기업확장은 같은 생산체계내에서 생산가용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학탈, M&A(mergers & acquisitions), 그리고 부수산업과의 새로운 계약관계 체결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구조조정은 조직 및 소유권 변화도 포함한다(Mathieu, 1996: 31-33).

4) 1990년대 들어서서 2차산업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3차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도시에서 종종적으로 나타나는 도시경제의 서비스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산업구조조정의 개념

단기(short-term) 구조조정: 단기적 기업손실 방지
장기(long-term) 구조조정: 장기적 기업이윤 추구
방어적(defensive) 구조조정: 신규투자나 신상품 개발 억제
적극적(active) 구조조정: 신규투자나 신상품 개발 활성화
소유권(ownership)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상의 소유권 변화
관리(management) 구조조정: 자본과 인력관리방법 변화
조직(organizational) 구조조정: 자율경영체제 구축 및 책임성 강조
생산(production) 구조조정: 생산라인 개발 및 개선
재무(financial) 구조조정: 판매증대, 생산비용 및 부채감축 등 재무관리 개선,
노무(labor) 구조조정: 인력감축, 인력의 재배치 및 생산성 확대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구조조정: 신생산업체를 위해 기존시설 신·개축
부문(sectoral) 구조조정: 품질, 자본과 노동력, 원자재가격, 기술개선 부문변화

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산업구조란 일반적으로 산업간의 구조(inter-industrial structure), 즉 산업상호간의 구성비 관계를 의미한다. 산업을 1·2·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구성비 관계를 보거나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으로 분류하고 그 구성비를 볼 때, 그리고 중공업을 소재산업, 가공조립산업 등으로 분류하여 그 구성변화를 보는 경우의 산업구조를 의미한다. 산업구조를 연구하는 데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까지의 산업구조조정이라 함은 주로 2차산업인 제조업에 중심을 두고, 질적적으로 공장재배치 및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차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하여서는 고수준의 진흥정책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임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만족만을 가지고 세계화·자본화·정보화시대의 경쟁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더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본고에서는 산업구조비 분석, 입지상 혹은 입지계수 분석(LQ: Location Quotient)과 부가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⁵⁾

1. 산업상호간 구성비 분석

산업의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재 수입항으로 국가발전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인천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통계에 따르면 체선율은 28.6%에 육박하고 선박의 평균체선일수가 1.7일로 반성적인 체선·체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률은 인천 지역경제발전의 행정·법률적 제약이다. 그 외에도 신규 공장의 제한, 공장용지와 부족,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

5) 이 외에도 욜만(Edward E. Ullman)과 디케이(Michall F. Decay)에 의해 개발된 것이 있는데, 한 지역이나 도시의 생존을 위하여 도시경제의 각 산업별로 요구되는 노동력의 최소한 구성비를 최소 수요로 하여 이에 대한 초과고용에 대하여 수출지향적이라 보며, 전문화된 산업으로 평가하는 최소고용수요량법(the minimum employment requirements technique)과 지역고용이 총고용의 선형함수이고 수출고용은 의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 후에 방정식을 만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이 있다.

등 여러 가지 의적 요인 있다. 산업내적요인으로는 인천은 경인공업지구의 행으로서 3차산업보다는 2차산업 위주의 공업단지로 성장하여 왔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인천지역의 지역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8.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인천시의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1차산업에 1.2%, 2차산업에 39.8%, 3차산업에 59.0%를 기록하여 전국 6대도시 중 2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⁶⁾ 또한 인천시는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이며, 제조업의 주종산업은 조립산업(기계장비, 조립품속, 자동차, 차량속)과 화학산업 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대기와 수질오염, 소음공해 및汎害교통량 유발 등 공해유발형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2차산업의 평균은 3차산업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유통 서비스부문(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은 본사가 아닌 지사체제로 운영되고, 서울본사의 지사화 및 생산공장화되어 하위 체제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 일자상 분석

우선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경제현황을 거시적·고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산업간의 구성을 어느 한지, 지역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 업종이 고부가가치인지 저부가가치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기초분석이다. 또한 군단에 있어서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저공해업종이면서 환경친화적인 업종인지도 파악해야 한다.⁷⁾ 지역경제현황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한데 산업내적인 분석과 산업외적인 환경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내적인 충돌에서 파악할 경우 산업별 취업구조, 경제활동인구, 지역내 산업별 총생산 비교 등을 이용한 거시적인 안목과 일자상 (일자계수, LQ: Location Quotient), 업종별 부가가치의 총생산량과 1인당생산량을 교차분석하는 부가가치분석도를 이용한 고시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를 전반해 볼 수 있다 (이만수, 1995).⁸⁾ 산업외적인 분석

6) 서울의 2차산업 비중은 30%, 부산은 30.8%, 대구는 31%이며 대전과 광주는 20% 미만이다.

7) 그래서 들어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해업종의 지역입지에 대하여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YIMBY(yes, in my backyard)라고 하여 자기지역에 문제의 시설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8) 일자상 혹은 일자계수는 P. S. Florence가 창안한 방법으로서 영어의 Location Quotient(LQ)라는 말이다. 이 방법의 전제는 모든 지역이 자족할 수 있고 전국과 같은 경제구조라면 각 지역의 각 산업의 고용의 백분비는 전국과 함께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계수는 어떤 지역 내에서의 특정 산업의 고용량 (E_{ij})과 그 지역내의 총고용량(E_{it})의 대비(E_{ij}/E_{it})를 한 후, 다시 전국 총고용량 중 특정 산업이 고용하는 양(E_{nj})을 전국총고용량(E_{nt})과의 대비(E_{nj}/E_{nt})를 또나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LQ = \frac{\frac{E_{ij}}{E_{it}}}{\frac{E_{nj}}{E_{nt}}}$	LQ: 일자상 혹은 일자계수 E_{ij} : 지역 i 내의 산업 j 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량 E_{it} : 지역 i 의 총고용량 E_{nj} : 전국 총고용량 중 산업 j 가 고용하는 양 E_{nt} : 전국 총고용량
--	--

LQ의 의미는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상대적 전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 이 방법은 어떤 지역의 고용이 전국고용량의 적절한 배분을 초과하면, 즉 일자상이 표준 1보다 크면 그 초과고용량은 수출산업에 풍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획일적인 전국소비와 생산유형을 득시적으로 가장하고 있고, 전국에 걸쳐 동일한 생산성 수준을 가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출입은 없다고 가장하고 있는 관점은 가지고 있으나,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의 구분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에서는 산업에 적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이나 법률 등의 두형적인 요소와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전기, 상하수도 등)과 고급전문인력을 적시에 수급해 해주는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훈련기관 등의 유행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지역경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입지상(혹은 입지계수)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제조업을 분석하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4,359), 가구 및 기타 제조업(3,004), 재생재료 가공처리업(2,93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628), 기계 및 장비제조업(1,617), 제1차 금속산업(1,511), 코코스 및 석유정제 및 혼연료 제조업(1,300) 등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경우 입지계수(LQ)는 다른 제조업보다 매우 높다.

〈표 2〉 입지상 분석

제조업 구 분	인천 (명)	6대도시 합계	6대도시비교 LQ계수	전국 (명)	LQ 계수*
음식료품	8,811	51,484	1.190	196,481	0.569
섬유제품	7,598	153,435	0.844	316,782	0.607
의복 및 모피제품	8,307	167,150	0.845	209,580	0.503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3,173	78,464	0.278	111,940	0.363
목재 및 나무제품	14,605	23,559	4.309	42,988	4.859
펄프, 종이, 종이제품	2,036	17,357	0.815	65,325	0.39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1,057	72,378	0.102	93,246	0.153
코코스, 석유정제, 혼연료제조	1,017	2,078	3.402	10,027	1.3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9,268	28,335	2.274	149,767	0.79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9,102	46,721	1.345	135,809	0.869
비금속 광물제품제조	6,296	17,965	2.436	139,116	0.580
제1차 금속산업	13,788	38,841	2.467	116,966	1.511
조립금속제품	21,918	68,931	2.210	172,541	1.32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35,154	121,108	2.018	278,522	1.617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2,618	10,382	1.753	26,036	1.197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	9,363	40,711	1.599	124,087	0.96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15,378	57,349	1.864	251,087	0.78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320	20,097	1.494	46,615	1.18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19,744	51,464	2.637	192,709	1.313
기타 운송장비제조	2,267	13,962	1.127	74,142	0.39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8,837	61,659	3.251	123,005	3.004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414	968	2.973	1,805	2.989
총계	225,167	1,565,122		2,885,349	

자료: 통계청 (1995년 지역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 및 작성

그러나 전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광역단체의 특성상 비교대상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기준으로 하여 일자계수(LQ)를 다시 산출하였다. $LQ = (E_{ij}/E_{it})/(E_{nj}/E_{nt})$ 에서 E_{ij} 의 E_{it} 는 그대로 두고 E_{nj} 를 해당 제조업 6대도시의 총 종업원수, E_{nt} 를 6대도시 제조업 총종업원수로 하여 일자계수(LQ)를 구하였다. 6대도시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인천지역의 석유제품 제조업, 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미구류 및 신발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펄프·종이, 종이제품 제조업의 일자계수(LQ)는 1.0 이하로 높다. 이 외의 업종의 일자계수(LQ)는 모두 1 이상이고, 일자계수의 값이 2이상 되는 업종은 10업종이나 된다. 이를 볼 때 6대도시를 비교한 경우 인천광역시의 제조업 전체 일자계수(LQ)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분석할 때 전국비교 일자계수가 든 열종이 6대도시 일자계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대도시 중 제조업의 전문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 분석

인천광역시의 제조업별 부가가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액별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 등의 순서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로 구분할 때는 토크스와 석유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이 가장 높고, 음식료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이었다. 특히 부가가치 총액과 1인당 부가가치액이 동시에 높은 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었다.

〈표 8〉 인천광역시 제조업 부가가치 현황, 1995

제조업	구 분	월평균 종사자 수(명)	부가가치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제조업	구 분	월평균 종사자 수(명)	부가가치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제1차 금속산업		13,783	636,161	50.49	음식료품		8,811	652,957	74.10
조립금속제품		21,918	552,625	25.22	석유제품		7,698	153,328	20.5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35,154	1,203,802	34.41	의류 및 모피제품		8,307	108,468	13.35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2,618	91,398	34.91	가죽, 가방, 미구류 및 신발		3,173	100,288	31.6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		9,363	211,266	22.56	특제 및 나무제품		14,605	333,694	23.9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15,378	311,524	20.26	펄프, 종이, 종이제품		2,036	70,628	34.68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320	134,233	31.0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작		1,057	18,653	17.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19,744	1,014,165	51.37	토크스, 석유정제, 핵연료제조		1,017	449,957	442.43
기타 운송장비제조		2,267	117,682	51.91	화합물 및 화학제품		9,268	494,769	53.89
기구 및 기타 제조업		26,837	778,049	26.9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9,102	238,378	26.19
제성제트 가공처리업		414	11,913	28.78	비금속 광물제품제조		6,293	258,930	41.13
제조업 전체							225,071	8,072,663	55.88

주: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월평균 종사자수

자료: 광州市 (1995년 지역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계산 및 작성

IV.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심을 끄는 것은 송도신도시 및 경인운하 건설, “2020 인천 Dream”계획, Tri-Port 기반구축 등을 제시하며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 1995, 1996, 1997). 올해 지방자치평가과정에서 이러한 연유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티더십 부분에서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물론 이들 계획 속에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비전 제시적인 성격도 내포되어 있어 확실한 전망과 성과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이상곤, 1997). 인천시는 지난 1994년부터 송도 앞바다 535만평을 매립해 송도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김포와 일부 도서지역 등을 편입하여 물리적 인 광장을 하였다.⁹⁾ 매립토지는 실제 양적성장 추구보다는 산업활동에 투자라는 투입요소의 원활한 흥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인천시의 광역화는 산업의 다양화와 생활환경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곤, 1997).

〈표 4〉 KFS추출법에 의한 1994년 지방경쟁력 평가: 인천

		내부호흡						외연능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핵심 성공요소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핵심 성공요소	점수	순위		
경제 운영 성과	59.3 4	지역 경제력	63.1 4	경제활력	53.2	5	지방 세계화	53.1 8	정보화	53.3	6		
				소득향상	83.2	2			세계화	50.0	9		
				소비구조	52.7	8			집중화	53.6	11		
사회 역량	55.6 10	주민 삶의 질	50.0 15	보건위생	50.0	15	지방 기업, 산업	58.1 9	고용증출	53.1	9		
				생활환경	57.8	13			느사안정	76.6	7		
				문화체육	52.6	11			산업진흥	58.8	10		
특자 역량	52.4 10	지방 금융 환경	54.1 7	금융호흡	53.7	8	지방인 프라스 트럭처	55.5 10	소송호흡	53.1	12		
				지역금융	52.9	11			주거편의	63.5	4		
				보증보험	63.8	6			환경자원	50.0	15		
학술 역량	54.5 11	지방파 학기술 수준	56.3 8	기술인력	57.5	10	지방 는 형성	53.1 11	경제인구	63.4	6		
				지적자산	52.8	4			학교교육	50.0	15		
				산학협동	63.8	7			평생학습	53.4	10		

참고: 「1994년 지역통계 연보」의 기초통계 667개를 활용한 경제지표 922개에 의한 6개시 9개도 지방경쟁력에 관한 상대적 평가 점수 및 순위

자료: 정진호 외 (1995), p. 184.

9) 인천에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및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지원단지도 건설하고, 미디어파크, 미디어 아카데미 등도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송도신도시는 매립지를 분양해 1조7천4백24억원에 팔하는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는 송도신도시내 76만평에 팔하는 땅을 매각하여 이 대금을 투입하여 미디어밸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양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정영수, 1997: 18-21).

인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력이다. 경제력이 높아지면 투자환경 및 투자역량이 증강되고, 다양한 이윤이 재투자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환경, 전취적인 기업기정신, 동반자로서 협정판료, 지도적인 개선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는 인적자원이다. 충분한 인적자원을 위해서는 지역의 학술 역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충실히 교육과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역내에서 다양하게 혹은 통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인천의 경우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숫자, 연구원, 대학교수의 숫자, 기업의 연구개발장치인원 등으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상황이다. 결국은 인천의 교육부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천에 머물거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천시의 교육과 교육환경, 그리고 교출률, 인재와 전자결제의 활용으로 교육체계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를 때 지역경쟁력의 한 요소가 충족될 수 있다. 셋째는 물적자원이다. 물적자원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로서 사회간접자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인천의 경우 토지, 용수, 교통, 항만시설 등이 전국 최고의 수준에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서 집적경제를 볼 수 있는데, 지역산업내의 집적경제가 형성이 되면 도시경쟁력의 고도화는 어렵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인천의 경우 집적경제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일관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상근, 1997). 표 4는 우리 나라 15개 시·도의 지방경쟁력을 평가한 것 중 인천광역시의 경쟁력을 나타낸 것이다(정진호 외, 1995: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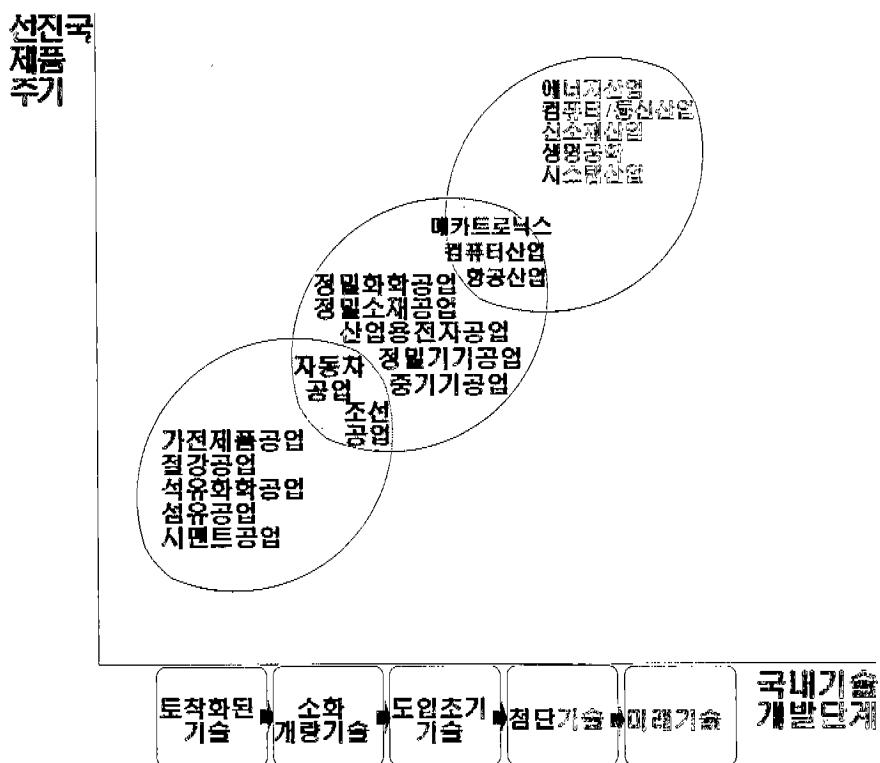
1. 산업구조조정 및 철단산업 육성

지역산업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기본전체가 필요하다. 기본전체의 첫째는 단기적이고 일시·변동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속하여 반드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장기적·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역산업구조조정은 지역경제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호사대학는 것을 염두할 때 경쟁의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에 고부가가치·자긍심·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등의 장기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지역마다 특성과 지역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조금씩 다르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는 산업구조조정에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향이다. 즉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는 것은 허구이며 허상이다 (Everything means nothing). 넷째로는 극도개발계획 및 광역 도시계획 등의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산업구조조정은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민족사업이나 시책사업과 연계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효과적인 전략은 중앙에서 시행하는 민족사업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체계를 총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김용열 외, 1997).

그리고 공업발전법 및 조세감면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로는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 측면 및 부설기업 정비에 기여해 왔지만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을 중부주도로 지원하는 드로잉 틀체계가 제기되고, WTO 보조금형태 등 국제규율상 대처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운영이 중

단된 상태이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 노력이 산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 되었지만, 협동의 구조조정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에 불과하고 구조조정을 선도해 나가야 할 대기업의 경우에는 합병·분할·자산처분·채무구조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실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장애요소가 충철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은 중소기업 및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과제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3〉 기술발전에 따른 비교우위산업의 변화



자료: 김용열 외 (1997).

특히 제조업 산업구조조정의 주요대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며, 상호 협조하는 협동화사업 추진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기업에 대하여 경쟁력강화 경영지도, 기술지도, 정보제공, 시설근대화 등의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생산성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및 풍토조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능력별위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끼리 상호 공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하여는 창업의 기회를 기술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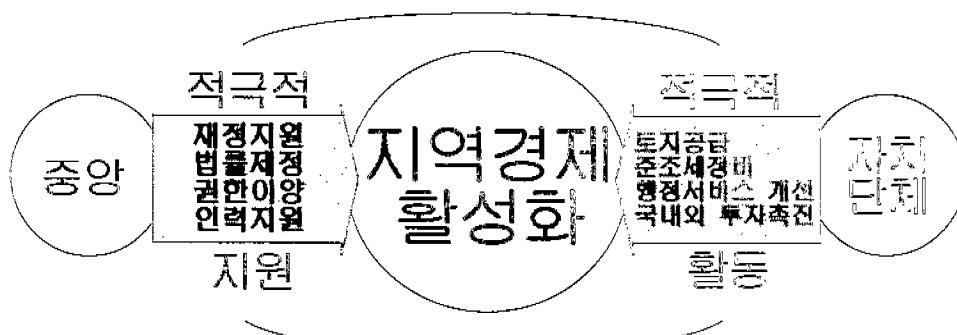
그리고 통새전략으로서 인천이 지난 입지적 특성을 살려서 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한 풀록산업과 철도선산업, 해안·도서지역이라는 점에서 관광과 유통산업을, 그리고 산업도시라는 환경에서 정보·금융·보험과 같은 생산자원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Port-port(항만, 공항, 기술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전략이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비즈니스(businessport)와 레저산업단지(leisureport), 휴식하고 살기좋은 도시(humanport) 전筹을 포함한 동시발전전략(concurrent development policy)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조장하고 기업들간의 핵심기술력을 공유화하여, 부품공업의 적극 육성을 통하여 대기업과의 공동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분담으로 기술 협상 및 산업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촉진시키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한 지정과 정부의 구조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 사업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업종·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하여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며,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산업구조조정을 제조업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중산업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확장된 시장이 아닌 제조업에 한정시킨 지방산업구조조정전략은 단순한 지지적 포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을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차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행정관리지원체제 강화 및 기능재편

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법률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에 대한 자율적 편향을 부여하거나 유일해화하여, 지방정부 또한 산업구조조정의 여건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그림 4〉 지방산업구조 조정 여건조성



자료: 필자가 작성

물론 전문성의 축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회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였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정착되고 있고 지방산업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산업구조조정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시책 및 정책수립을 위해 꼭 수여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직까지 지역경제 관련조직 및 기능개편,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 확립,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구비 등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장애요소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직과 조례 등을 정비하여 지금까지의 통제위주에서 경제활동 지원과 전문적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개발 및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진흥법(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등), 육성법(철강공업육성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등)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협력정비를 요청하고 재정지원과 유도적 역할을 신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정보(기술, 경영, 행정, 인력취업, 금융 및 투자정보 등)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관련조직은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역시·도의 경우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 내의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등이 담당행정을 관장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 산업과, 지역경제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이를 조직들은 지도·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경제적 지원, 경제집단간의 이해조정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행정의 역할이 민간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국의 기능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점차 규제를 자율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운영을 책임지는 책임경영관리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⁰⁾ 특히 지방공무원을 임용하고 배치하는데 일반행정을 위주로 인사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재정분야와 같은 영역을 두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공분야의 인사행정에도 계약제와 같은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체제와 성과중심으로 인력을 관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국장과 같은 자리 등을 대내외에 공개하여 외부경제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책임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새정부에서 개혁과제로 다루어 볼 만하다. 미국의 지방도시에서는 경제개발국(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서장은 물론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계약제로 일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0)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가 득점적으로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바람직한 것은 민·관합동의 연구기관이나 민·관합동의 위원회나 공사형의 기구를 만들어 지역경제인과 관련분야의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경제발전정책을 제의한 토지이용정책이나 교통·환경정책 등은 기존의 지방행정기관이 계속 수행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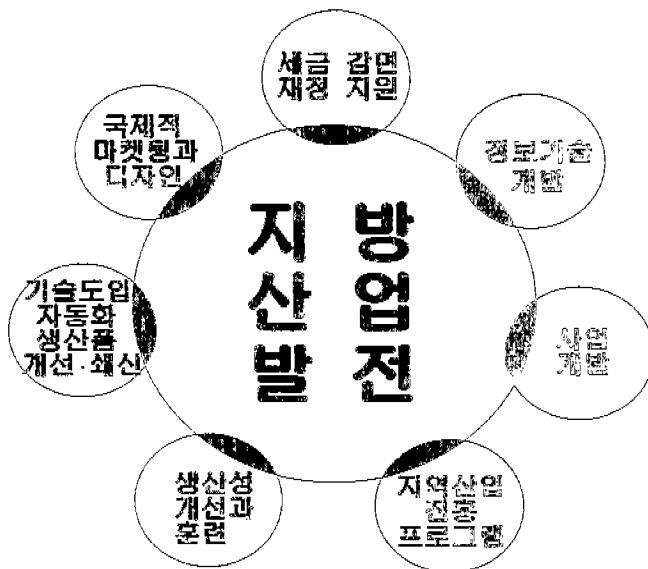
(표 5)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분야 주도업무

해당조직	담당업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업무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경제실사 통상진흥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화 관리사업 연구개발 • 지역경제활성화 수립 • 지역경제협회회員 운영 • 지역경제종합정책보선파 운영 •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기술도입 및 수출 • 산업박람회 개최 운영
	중소기업진흥과 중소기업지원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산업지역 지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 지방기업의 자동화 지원
	농업과 품질관리 연락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지원 • 지원지역상품의 품질관리 • 지역상품의 디자인·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국제협력관 국제교류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의 통상교류 • 국제교류 • 외국회사, 국제기관, 국제회의 유치
관련부서	농정 수산 도시 특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된 경로로 충족적으로 연계된 업무 협조의 정착 조성 필요

자료: 인천광역시의 조직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지방화시대를 맞아 해당지방의 산업발전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발전 원칙에 일각하여 지역경제를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화 초기단계에서 지방자정이 아직은 취약하고도 중앙정부와의 배칭펀드(matching fund)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되, 배분과정에서 각 지방정부가 확보한 자금규모에 비례하여 배분율을 정하여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민간 스스로 시장원리에 일각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지원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혜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기술개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대로 지역경제를 세계화시킨다는 정책목표를 가져야 한다. 기업자체의 노력 외에 중앙·지방정부도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 산업지원 여건변화 및 지원수단



자료: Meyanathan (1995), p. 78.

3. 공단조성과 공장재배치 및 연구지원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새로운 공장부지이다. 공장이전 및 유망산업에 대한 지역관내의 유치는 지역경제발전과 가장 길학된 전략이 아닌가 한다. 공단조성을 위해서는 특히 산업입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소재 공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산업입지 수요조사 (1996년 6월)」에 따르면 인천소재 업체들의 공장용지나 입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다.¹¹⁾ 수요조사에 따르면 공장부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응답업체의 44.9%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소재 업체 중 과반수에 가까운 업체가 공장용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인천광역시가 조성하는 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응답비율의 26.9%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독립형 공장을 원하였으며, 평균 2,571평의 부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분양 희망업체는 평균 2,658평, 일대 희망업체는 1,838 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천지역내 총업체수에 대비하여 추정해 보면 약 450만평정도의 순수 공장부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까지 포함한다면 730만평 정도의 공장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의에도 도심내에 산재한 2,000 여개에 달하는 무동류공장의 이전부지와 이전을 원하는 드심내 대규모 업체의 의혹이전을 위한 부지 및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등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1,500

11)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본 조사의 대상은 인천지역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업종별 표본조사업체 1,476개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를 하였고, 회수율은 1,052개로 71.3%였다. 조사기간은 1996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단정 이상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공장입지를 조성하고, 기존 도심·부도심의 공장을 설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질적경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간은 도시기능 및 공장재화, 를 통한 전략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천시 자체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지역과 연합하여 함께 실현하는 것이 더 좋다. 즉 광역형정적 차원에서 서울·인천·수원(SE-IN-SU)이라는 삼각권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단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토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하여 풀수적인 것이 첨단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인데, 새로운 공간조성을 통하여 유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통업종들이나 관련산업들이 인천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과 입지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연구단지를 눈힐 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 (Research Triangle Park, RTP)를 성공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이 있는 채플힐, 듀크대학이 있는 더렐, 그리고 탈리온 있는 삼각형의 중앙에 형성되어 6,800에이커에 자리잡고 있다. 195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71개 연구기관과 관련조직에 약 34,000명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의 RTP에 일주한 이유인데, 자세한 내용은 위 표에 적시되어 있다 (Luger & Goldstein, 1991).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능력이 상당한 수준인 대학이 가까이 있다는 점은 인천의 경우 짚을 것을 시사해준다. 고급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관련기관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야 하나, 인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점이 더욱 취약하다. 종합대학 2개(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외에 인천전문대 및 인하공전 등이 있으나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적은 편이고, 이를 대학들도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정착하는데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위에 나와난 다른 이유들도 참고하여 인천으로 기업들이나 관련조직들이 일주하도록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의에도 실무콘설팅 등이 연구와 밴치, 마칭드성이 된다 (Saxenian, 1996; Kaplan, 1995).

〈표 6〉 Research Triangle Park(RTP)에 일주한 이유 (연구개발)

일주이유	증오도
연구 중심대학의 균접성	1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함	2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항	3
기업환경	4
문화적 친숙성	5
생활환경	6
공공 서비스의 질	7
비숙련인력의 확보가 용이함	8
시장의 균접성	9
기업 서비스의 균접성	10
인프라스트럭처의 질과 접합성	11

자료: Luger & Goldstein (1991), p. 85.

4. 서비스산업 육성 및 농수산업 지원

인천광역시의 2차산업 편중 구조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의 자족기능을 악화시킴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의존형 및 지사/공장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족적이고 국제적 중심도시로서의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3차산업(유통, 상업, 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현재의 인천은 비대한 2차산업구조에 비해 이를 지원하는 3차산업의 비중이 너무 미약하여 3차산업의 외부의존도(특히 서울)가 높다.¹²⁾ 전략적으로는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되 지역적으로 고약한 금융, 유통, 무역부문의 3차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3차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으로 오겠다는 기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업이나 조직을 찾아나서야 한다.¹³⁾ 농어촌특산단지를 자율적으로 육성하되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산품을 지정하여 육성해야 한다. 환경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이 때에 유기·자연·트증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수송소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건설도 필요한데, 생산자조직 및 산지 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며 때로는 가공 및 소포장하여 직영점·가맹점·슈퍼마켓·대량수요처 등에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보관, 소포장, 유통가공, 배송, 현장판매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민간유통업자가 공동출자 (컨소시엄)하여 건설·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범인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¹⁴⁾

5. 지역경제개발계획수립 및 산업정책개발 다원화

경제발전문제는 앞으로 정부보다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우러 잘 정리된 계획도 기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러한 외국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가능한 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발전계획을

12) 인천광역시의 도소매 거래유동을 살펴보면 도매업의 매출액은 6대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매유통업의 경우도 유입보다 서울로의 유출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말 인천지역의 전국대비 예금 및 대출비중은 각각 3.9%로 서울의 금융비중 50.9%, 부산의 7.3%, 대구의 5.1%에 의해 금융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4; 한국은행, 1996).

13) 산업구조조정에는 1차산업인 농수산업까지도 포함된다. WTO출범 이후 가장 파격을 많이 받은 것이 농수산업이다. 농지매매와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비의 지원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의 교환·분할을 촉진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영세·농가의 전업을 유도하고, 자본과 기술집약형의 첨단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발농사위주의 영농구조를 인식, 화훼 혹은 참깨·들깨, 고소득 비닐하우스재배 등의 경제성 있고 특화시킬 수 있는 영농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갈 전문화 규모화를 촉진업능을 육성하되,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며,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이 농기계구입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14) 수산업에 있어서도 세계화·자본화시대에 발맞추어 바다환경을 살리면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며, 대체 양식어장 및 어로기술, 어선현대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역학교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는 현재 시기 특성적으로 주도하는 행태를 일탈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가칭 인천경제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인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공사화하거나 제3직역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¹⁵⁾

미국 알래스카의 엔커리지시를 모델로 한다면 가칭 “인천경제발전공사(Anchor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기구를 구축하여 기업형 경영과 공조직인 경제발전 추진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접 타 시·도와 협력하여 가칭 서해안경제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경제발전공사를 산·학·연·관합동으로 설립할 경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 혹은 기업체와 정부의 중간자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마케팅역 (city marketing agent) 혹은 브로커(broker)역할: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홍보, 마케팅, 로비, 정책수행과 전략발굴, 기관·내외경제적 역할·행사 등; (3) 지역 상공농수산업을 위한 전략개발자문역할: 상공회의소 신한 기업체들의 발전전략을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지원하지만, 상공회의소의 본래기능은 침해하지 않고 역할분담; (4) 기존 기업체의 이해증진: 그리고 (5) 새로운 기업체를 발굴하여 그들을 유치해서 인천지역에 투자를 촉진하는데 주력하고 경제발전계획 등 거시적 발전전략들을 및 연구지원에 주목하는 것 등이다.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은 지방정부의 어느 한 조직에서 해야 할 일수가 아니라 여러 조직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융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이고 가치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시적인 「산업구조조정기획단」 등의 팀(Team)이나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성은 관계전문가들을 자준위원회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인천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교류를 위한 신도시 및 공항·후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공동연구개발도 필요하다.¹⁶⁾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개발에 대한 대처를 최소화하고 자치단체들간에 공동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내외적인 홍보강화차원으로 기업유치홍보단을 구성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기본적 홍보와 해외 복지회나 전시회에 적극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기업들을 알리야 한다. 국내외 유수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희망기업에 대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15) 엔커리지 경제개발공사(Anchorag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AECC)라는 기관의 일정(AEDC mission)은 엔커리지 지역경제의 성장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엔커리지경제개발공사의 이사는 3년 임기의 1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민간인이다(시청 공무원 포함 아님). 그리고 고문단이 있으며, 이 고문단에는 당연직으로 엔커리지시장, 엔커리지 시의회 의원 2명, 알래스카주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각 1명, 당 공사의 전임 이사장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 엔커리지대학총장, 일부 주요 지역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으로는 상설실, 특별과제부, 조사정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정은 시정부조금(municipal grants), 주정부조금(state grants), 민간기업의 후원(private donations)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체로서 1987년에 설립되었다.

16)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Forward Hampton Roads라는 기관은 날씨지니아의 5개 드시의 상공회의소들의 체육을 통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한·관외 경제정책자들 및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도로 인접드시 정부들의 드시개발책임자가 정례모임도 갖고 국내외 투자유치나 지역홍보노력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세제지원 및 공장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장이 설립될 때까지 모든 제도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공장재배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 및 기구가 필요하며, 가능한 민간분야의 공조하여 민간자율조정위원회(전문가, 행정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환경친화적 발전전략 모색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의 기본이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이념은 지역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천 역시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생산과 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즉 재화, 서비스의 생산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설비, 환경, 행정, 위탁시설, 사회복지 등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생활욕구가 증대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욕구의 팽배는 자칫하면 지역경제의 산업기반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함께 자니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혈력을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산과 생활의 논리를 일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되는 측면이 더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의 경우, 이를 양자를 가능한 한 높은 수준에서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한 경제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환경, 교통, 주거문제에 올바로 대응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주민의 자주적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다.

둘째, 생산과 환경의 조화이다. 지나친 경제개발과 공업화는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한편 환경보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경제의 양적 팽창과 환경(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전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론도 바로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산업구조의 고도화 역시 단지 양적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단시행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에 조화되는 산업구조로서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ECDM(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 and Manufacturing)을 이용하여 R&D단계와 디자인단계의 정책과 제품의 최종폐기와 오염예방까지를 고려한 종체적인 생산전략이 필요하다.

VII. 결언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방안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시일내에 호과를 볼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도 아니다. 산업구조조정을 단지 2차산업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혈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특옹작들의 생산 및 관광농원화 혹은 연안지역을 관광벨트화시켜 특성화된 농수산업이 2차산업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화를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산업구조조정을 보는 시각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산업인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공급조성, 공장재배치 등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통적 형태의 산업구조 조정전략이다. 이제는 세계화·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따라서 발전이라는 개념을 거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도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목은 지구촌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한 국대트 말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전략을 2차산업 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특성화, 2차산업과 3차산업간의 균형, 산업의적인 변수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간의 둘이 아니라, 지역경제인, 시민, 연구기관 등 모든 지역주체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져 나아야 할 과제이다.

실제 지방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성공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이 열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 지방산업구조조정에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편, 지방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모두 책임질 수 없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84.8%로 블록하며, 전국평균은 52.1%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로는 거의 우둔에 가깝다.

둘째,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지방화의 역사가 짧은 원인으로겠지만, 지방산업구조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우드하는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찌까운 현실이다. 종단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학의 공부파에서 공장재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산업파, 지역경제파에서 지방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괄광하고 있는데, 이를 조직들은 실제 규제 및 지도·통제 기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기존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박차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어서, 앞으로 적절한 조직기반, 업무재배분 및 기능조정이 없이는 지방산업구조조정이 카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one-stop service나 non-stop service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행정자율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빌률 및 상위계획들의 영향이다. 수도권정비법 등, 앞서 지적한 대로 각종 진흥법과 육성법 등의 지방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령이나 규제가 혼존하고 있고, 그로 종합개발계획, 국책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의 상위계획들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과 상위계획들은 지방산업구조조정에 대부분 결집들이 된다. 이들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산업구조조정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로는 매우 어렵다.

우리 나라의 지방화 역사가 짧아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지역 산업구조조정에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한계와 장애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할 수는 없다. 다양하면서 차별화된 전략, 실현가능한 수단, 비전제시와 푸렷한 실천의지 및 사명감을 가지고 그한경쟁시대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변수이고, 둘째는 행정현장에 경영마인드를 확산하여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도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판주도의 행정형태를 일탈하여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지역발전문제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독점하는 시대는 지

나갔다. 지역전체가 빨벗고 나서도 부족한 시대가 도래했다. 인천은 약속의 땅이다. 젖과 물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거름을 없애고 내실을 다지는 각고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용렬·김인중·김미석. (1997).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서울: 산업 연구원.
- 김관석. (1997). "업구조조정을 통한 인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국토』, pp. 36-42.
- 대한상공회의소. (1997a). 「수도권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터.
- _____. (1997b). 「환경친화적 생산 및 경영전략」.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박희정. (1995). 「지방산업구조 개편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윤진호. (1996). "21세기를 향한 인천지역 공업구조의 문제점과 고도화 방안."『한국은행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결과보고서』. 인천: 한국은행 인천지점.
- 이만수. (1995). 「지역경제학」. 서울: 박영사.
- 이상곤. (1997). "자치발전과 지역경제: 진단과 향후 정책진토."『인천광역시 및 인천발전연구원 주최 민선자치 2주년 기념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논문집』.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이용현. (1994). "첨단산업의 고도화와 산업인력개발."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pp. 69-89.
- 인천광역시. (1995a). 「우리가 사는 인천」.
- _____. (1995b). 「인천광역시의 발전방향」.
- _____. (1995c). 「인천지역 경제현황」.
- _____. (1996a). 「인천지역 산업입지 수요 조사」.
- _____. (1996b). 「인천경제발전 5개년 계획」.
- _____. (1996c). 「21세기 인천의 경제발전 구상」. 인천: 인천광역시.
- _____. (1996d). 「인천경제발전 5개년계획」. 인천: 인천광역시.
- _____. (1997a).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 인천광역시.
- _____. (1997b). 「97 인천시정」. 인천: 인천광역시.
- 인천상공회의소. (1992). 「인천남항의 조기발전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경제연구센터.
- _____. (1996a). 「21세기 인천의 관광자원 개발과 진흥전략」.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 연구센터.
- _____. (1996b). 「인천경제지표」.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 재정경제원. (1997a). 「97년 경제정책방향」. 서울: 재정경제원.
- _____. (1997b). 「지방증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서울: 재정경제원.
- 정진호·오연천·김익식·한표환·곽체기·조동호. (1995).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통계청. (1993). 「지역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_____. (1994a).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 서울: 통계청.
- _____. (1994b). 「지역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_____. (1995). 「지역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통상산업부. (1996). 「200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인)」. 서울: 통상산업부.
- _____. (1997).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방안」. 서울: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 한국개발연구원. (1997).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립경제교육 연구소.
- 한국은행. (1994). 「인천지역경제의 현황 및 문제」. 인천: 한국은행 인천지부.
- _____. (1996). 「지역금융통계」. 서울: 한국은행.
- Best, Michael H. (1990). *The New Competition: Institution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Cambridge, UK: Polity Press.
- Kaplan, Jerry. (1995). *Startup: a Silicon Valley Adventure*. Boston: Houghton.
- Luger, Michael & Goldstein, H. (1991). *Technology in the Garden*,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ieberman, Ira. (1990).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and Practice*. Washington, DC: World Bank.
- Mathieu, Nicholas. (1996). *Industrial Restructuring: World Bank Experience, Future Challenges*. Washington, DC: World Bank.
- Mayanathan, Saha D. (eds.). (1994).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inkages: Examples from East Asia*. Washington, DC: World Bank.
- Pezzey, John. (1992).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s: An Economic Analysis*. Washington, DC: World Bank.
- Saxenian, Anne L. (1996).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leight, Steven R. (1998). *Economic Restructuring and Emerging Patterns of Industrial Relation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金鉉錫: 미국 The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Toward Representative Bureaucracy) 버지니아주립대학인 Old Dominion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시립인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분야의 인사조직과 행정개혁이며, 저서로는 「세인사행정론」(공저, 1996), 「한국행정개혁론」(공저, 1997), 「Korean Public Administration」(공저, 1997)이 있고, 다수의 논문 중에서 미국의 *Public Administration Review*(PAR)에 실린 것으로는 “Asian Americans in the Public Service”(1984), “Dealing with Them: Preparing State and Local Officials for the Cross-Cultural Challenge”(1995), “Asian Americans in the Federal Service: A Reply”(1997) 등이 있다.